

# 안철수·황교안, 김기현 사퇴 압박... “전대 끝나도 진상규명”

## 국민의힘 전대 투표 종료

땅 투기, 대통령실 개입 의혹 지적 김 후보 “제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尹 대통령 전대 참석... 표심 귀추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까지 하루 남은 7일 주요 당권 주자들은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경쟁자 견제에 집중했다. 현안별로 당 대표 후보 간 치열하게 다투는 한편, 결선투표를 고려한 연대도 이어졌다.

안철수·황교안 당 대표 후보는 7일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및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연루를 이유로 ‘김기현 당 후보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투표 마지막 날에 사실상 ‘연대’를 선언한 셈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비정상상을 정상화시키는 당원들의 축제여야 하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후보 관련 땅 투기 및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당 도덕성, 윤석열 정부 공정성과 직결된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6일 나경원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꽃다발을 받고 밝게 웃고 있다.



안철수,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했다.

김 후보에게 “(땅 투기 의혹 및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두 사건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한 이들은 “김 후보가 이미 국민의힘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 김 후보는 즉각 사퇴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두 후보가 ‘반(反)김기현’ 연대로 한 목소리를 내며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김 후보가)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이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갖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도덕성을 바로 잡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위해 함께 힘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두 후보는 결선투표까지 고려해 ‘반(反)김기현’ 연대를 구축한 것이라는 해석은 부정했다. 황 후보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 정의와 자유, 당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진 것을 그대로 뒤야 겠나”며 “이 문제가 유야무야 묻히면 다시 반복될 것이고, 우리나라 자유민

주주의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 없이 반드시 이 일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까지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하람 당 대표 후보도 비상대책위원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나. 사실은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물러나야 하며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뜻에서 (한 것이 아니겠나)”라며 “(그런) 뜻에서 저희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캠프는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 강승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오후 고위공

직자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황 후보도 “수사 외에 징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김기현 후보는 투기 및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사퇴하라는 주장에 “당원들이 역정 낸다”고 맞섰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제가 관련한 것도 아니고 제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기에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은 뒤 이같이 말했다.

당 대표 후보직 사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김 후보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보게 된다”며 맞섰다.

한편 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 당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에 대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인 만큼 당권 주자들은 표심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더민주, ‘李대표 체제 존속’ 집안싸움 조짐

# “분열 도움 안돼” vs “사법리스크 발목”

(친이재명계)

(비이재명계)

당 지지도 하락세... 계파갈등 기류 부어 지도부 소통 의지에도 명분 쌓기 치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내홍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체제 존속을 두고 친(親)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의 명분 쌓기가 치열하다.

7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하는 한, 내년에 있을 22대 총선 패배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비이재명계인 조웅천 민주당 의원은 7일 BBS라디오에 나와 “정순신 사태,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큰 이슈다. 우리 사회가 갖는 모든 모순을 축약적으로 가진 이슈”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말로만 하지만 완전히 거꾸로 간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에) 학교폭력을 책임 지지 않고 거짓말로 어떻게든 모면하려 하고 또 검사냐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찰 장악이란 이슈, 강제징용 제3차 배상 문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대놓고 개입을 하다 녹취까지 나왔는데, 3단 콤보가 나왔으면 정부여당은 그로기 사태를 면치 못해야 한다. 그런데 여론조사 하면 어떻게 나오냐”라고 반문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 지지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서울에선 정당 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도가 국민의힘에 비해 반토막나고 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밀집한 수도권 의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 인터뷰를 통해 표집한 자체조사(표본오차 ±3.1% 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9.4%,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누리집 참조)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29%인 반면 서울 거주 응답자의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21%로 더 벌어졌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청년당원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당직자 전면 교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민주당 혁신회의 설치 ▲선거제도 개편안 추진 ▲당대표급 공통공약추진단 운영 ▲국민 참여 당대표 타운홀 미팅 등 5대 실천과제를 제안하며 지도부의 이재명 색채 지우기와 당의 혁신을 요구했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표결을 아예 거부하는 안을 제시하고 당의 동력을 모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관철하자고 주장한다. 20대 대선과 지난해 전당대회를 거쳐 당의 구심점으로 거듭난 이 대표 체제를 대신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 대안이 없고 분열을 가속화해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난주 쉬어갔던 만찬 모임을 7일부터 이어가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비명계 인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을 만나 당 상황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의원들 선수별 모임도 이어질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튀르키예 지진피해 현장에 긴급구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와 민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여진과 추위가 이어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에 전념해 온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밝혔다. /뉴시스

## 박홍근 “원내대표 동시퇴진, 확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표단계 아니지만 공감대는 이뤄”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양당의 원내대표가 오는 4월말 퇴진에 합의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공식 발표 단계까진 아니지만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5월 두 번째 주까지 임기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8일까지로 알고 있다. 저는 벌써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 주 원내대표가 잔여 임기만 하고 마지못해 저는 또 네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달 가량만 일을 해야

그는 “이것이 국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쪽(국민의힘)도 3월 8일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원내대표의 임기를 내부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다. 그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두 사람은 4월 임시회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마무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공식적으로 이걸 합의해서 발표할 그런 상황까진 아니고 그런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게 특정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가 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